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등 사회과에서의 인구교육

송 성 대*

목 차

1. 서 론
2.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변동추이와 문제점
3. 학교 인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4. 인구변천(the demographic transition) 단계에 따른 인구문제
5.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안)론
6. 결 론

1. 서 론

‘건전한’ 행복과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의 자녀관 그리고 국가의 인구 정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구문제 중 무엇(What)을, 어떻게(How), 왜(Why)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학교 교육의 일반적 목적은 학습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지식을 연마하고 나아가 행복을 위한 자신의 행동과 복지를 위한 사회의 변화에 기여토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구 현상은 학습자와 학습자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 요소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적 내용을 알려주는 중요 지표이자 정보가 된다. 예컨대 “경제가 사회의 토대라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경제 및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인간이며, 경제 및 사회는 인간이라는 토대에서 만들어지는 상부구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할 한다. 여기서 ‘인간’이란 곧 ‘인구’를 의미한다.

출산을 결정하고 양육을 담당해온 성은 여성이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몫이 우선이지만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 그리고 개인이 우선이다.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

다양한 삶의 보장은 한 사회의 민주화 정도를 결정짓는 가능자다. 고령화에 대한 문제 해결은 재정만 확보되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가치관 때문에 한번 늦춰진 초혼, 출산 연령이 앞당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말도 한다. 그럼에도 ‘자발적 수정’에 대한 기대없이 국가공동체를 위해서 ‘빨리 결혼해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는 집단주의적 분위기 조성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공할 수도 없다. ‘출산은 애국이다’라는 출산장려 운동의 구호는 “둘도 많다!”던 숨가쁜 1970년대 산아제한 운동 구호와 방향만 다를 뿐 차이가 없게 보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 목표는 개인의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

한국보다 일찍 ‘저출산 대책’을 실행한 유럽에서도 ‘남녀 간의 성별분업 유지’를 전제로 대책을 마련한 독일과 스페인 등의 출산율이 가장 낮다. 이들 국가의 저출산 대책은 부모휴가, 육아수당, 보육시설의 확충보다는 ‘여성’에 대한 육아휴가 보장을 중시해 여성 개인들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맡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돌봄노동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저출산과 직결된다는 점은 국가 간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흔히 개발도상국 단계를 넘어선 나라들은 모두 다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스스로의 희망에 의해서건 사회경제적 압력에 떠밀려서건, 이제 한국사회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과 가정’을 둘 다 감당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돌봄노동의 공백’이고 ‘맞벌이 부부의 가사일 신경전’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며 일하고 사는 일이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점점 더 힘겨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저출산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며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많이 낳아라, 적게 낳아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를 많이 낳으면 죄인이나 혹은 야만인 취급을 하면서 불임수술에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 여성의 처지에서 보면, 저출산이나 고출산 어느 쪽이든 이런 것을 문제 삼아 여성의 몸을 적정 수준의 재생산에 봉사해야 하는 도구로 취급하는 모든 캠페인이나 정책들에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행위의 집합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에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기는 하다. 이는 어떠한 인구문제든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가치관과 국가의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변동추이와 문제점

1) 저출산의 변동추이와 문제점

한때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의 성공적인 근대화를 대표하는 척도였던 인구 정책의 성공이 지금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은 1960년 6.0에서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Zero-population)인 2.1로 감소한 이래 2005년 현재 세계 인구통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 즉 국가적 재앙 수준인 1.08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못 되는 수준이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저출산 비상이 걸린 일본도 1.29명으로 우리보다는 사정이 한결 낫다. 그런데 북한 여성의 출산율은 평균 2.0명으로 한국보다 높으며 니제르(8.0명), 기니-비사우(7.1명), 말리(7.1명) 등은 최고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재앙적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경제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일단 억제된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이 인구를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표 1>에도 보듯이 2005년 현재 세계 인구통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70년 이후 30여년간의 변동을 볼 때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다른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보다 급속한 것이었다.

출산율의 감소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개인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미혼률의 상승, 초혼연령의 상승, 기혼여성들의 출산 기피 등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개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사회적 환경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실업과 고용불안정 등의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 산업·직업 구조의 현대화, 주거 비용 및 주거 불안정 증대, 일-가정 양립 어려움, 육아지원 인프라 미흡,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의 가족지원 기능 약화 등이 출산 기피와 감소에 영향을 줬다.¹⁾

1) 방하남(2006),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우리 교육의 전략,"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 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p. 4.

<표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추이

| | 1960 | 1970 | 1980 | 1983 | 1990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합계출산율(명) | 6.00 | 4.53 | 2.83 | 2.08 | 1.59 | 1.47 | 1.30 | 1.17 | 1.19 | 1.16 | 1.08 |
| 출산아수(만명) | 104 | 100 | 86 | 77 | 65 | 63 | 55 | 49 | 49 | 47 | 44 |

자료 : 통계청, 「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표 2> OECD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 | 1970 | 1980 | 1990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일본 | 2.13 | 1.75 | 1.54 | 1.41 | 1.33 | 1.32 | 1.29 | 1.29 |
| 프랑스 | 2.47 | 1.95 | 1.78 | 1.88 | 1.89 | 1.88 | 1.89 | 1.90 |
| 독일 | 2.03 | 1.56 | 1.45 | 1.38 | 1.35 | 1.31 | 1.34 | 1.37 |
| 영국 | 2.43 | 1.90 | 1.83 | 1.64 | 1.63 | 1.64 | 1.71 | 1.74 |
| 이태리 | 2.42 | 1.64 | 1.33 | 1.24 | 1.26 | 1.27 | 1.30 | 1.33 |
| 스페인 | 2.90 | 1.68 | 2.13 | 1.54 | - | 1.25 | - | - |
| 스웨덴 | 1.92 | 1.68 | 2.13 | 1.54 | - | 1.65 | - | - |
| 노르웨이 | 2.50 | 1.72 | 1.93 | 1.85 | - | 1.75 | - | - |
| 체코 | 1.91 | 2.10 | 1.89 | 1.14 | 1.15 | 1.15 | 1.17 | 1.23 |
| 폴란드 | 2.20 | 2.28 | 2.04 | 1.34 | - | 1.24 | - | - |
| 미국 | 2.48 | 1.84 | 2.08 | 2.06 | 2.03 | 2.01 | 2.04 | 2.05 |
| 호주 | 2.86 | 1.90 | 1.91 | 1.75 | - | 1.75 | - | = |

자료 : ① 통계청, 「인구통계연보」, 2005 ② UN, Population Perspectives, 2004 ③ 일본 후생노동성 www.mhlw.go.jp
 ④ 미국 NCHS www.cdc.gov ⑤ UN : Demographic Yearbook 2003 ⑥ 유럽연합 : <http://epp.eurostat.ec.eu.int>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이는 교육 수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교 시설과 교원의 공급과 배치에 있어서 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동시에 학령인구의 감소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열악한 우리의 교육 환경과 자원을 재배치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인구전망(2005)에 의하면 3세부터 21세까지의 학령인구는 2005년 현재 1,226만 명에서 2010년 1,226만명, 2020년 879만명, 2030년 741만명으로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물론 개인의 가치관이 중요하지만 이 가치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의 정책 또한 중요하다. 프랑스의 예를 보자.

프랑스는 이미 1970년대부터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가 됐다. 이 문제로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해왔고 대책에도 제일 앞장섰던 나라가 프랑스다. 동거만 하고 결혼하지 않는 나라,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로 많이 알려졌지만 프랑스의 출산기피문화

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결혼 건수는 여전히 줄고 있으나 출산율의 경우 1996년 하락세가 그치고 상승하기 시작, 10년동안 꾸준히 올라갔다. 그 변화가 지난해 '출산율 2'로 나타난 것이다. 유럽 평균 출산율은 현재 1.5이다. 프랑스는 유럽 선진국들 중 드물게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보다 출산에 의한 인구증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다. 이러한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정책이 사회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동시에 유럽 전반의 '회색화(고령화)'에 반전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5년 프랑스의 국방비 지출액은 450억달러(약 42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2.6%였다. 반면 가족친화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GDP의 3%를 넘겼다. 가족친화정책에 국가의 최우선순위를 놓고 국방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은 셈이다. 연간 50조원을 출산정책에 쏟아 붓고 임신 6개월부터 무려 40여 가지나 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다. 돈으로 아이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프랑스 정부는 임신부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뒤 휴직한 여성에게는 길게는 3년간 매달 500유로(약 6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줬다. 남성들에게도 출산휴가를 보장해준 것은 물론이다. 셋째 아이를 낳아 출산휴가를 받은 아빠나 엄마에겐 1년간 매달 750유로의 보조금을 주며,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면 매달 1000유로를 준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쇼핑할 때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는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의 핵심은 역시 교육이었다.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보육시설은 무조건 무료이고 공교육은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이뤄지게 했다. 낮동안 아이를 보모나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용을 낮추고 방과 후와 방학 기간 보육 시스템을 갖춰 일하는 엄마들을 도왔다. 프랑스의 여성 고용은 유럽연합내 최고로, 25-49세 여성 취업률이 81%에 이른다. '일과 아이 키우기'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공비결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밖에 2자녀 이상 수당, 편부모 수당, 자녀 개학 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제도도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에도 동등한 혜택을 주어 젊은 층의 동거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한몫 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1.08)이 최하위인 한국은 저출산에 들이는 예산 또한 최하위 수준이다. 2005년 정부가 큰 마음먹고 내놓은 저출산종합대책 예산이 GDP 기준 0.4%(연평균 3조 7600억원)에 불과하다. 엄청난 액수의 양육비와 사교육비가 두려워 애 낳기를 꺼리는 부부들에게 몇 푼의 지원금을 쥐 봐야 애를 낳을 리 만무하다. 프랑스 수준엔 못 미친다 해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서두르지 않는 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만큼 급속한 출산율 저하를 되돌리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양한 주장을 지식적 차원에서 학습토록하고 그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가족 가치의 붕괴나 인구 감소로 인한 국력 약화 때문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가족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각기 매우 다른 것일뿐더러 다양한 가족형태야말로 개인의 결정권의 영역에 있는 문제이지 전체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도 그 자체로 우려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인구규모에서 바로 국력이 나오는 것이 아닐뿐더러 경쟁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의미에서 국력 운운이 국민의 삶의 질에 앞서는 개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²⁾라는 것이다.

한편 불교, 개신교, 천주교 대표들이 2005년 6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이들은 발족 취지문에서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민족적 재앙과도 같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근시안적 인구 억제정책이 생명윤리를 무너뜨렸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국가가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한 뒤 정부에 '친 가정적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종교계는 △출산비 보조 및 셋째 자녀 무료 출산 지원 △생명의 장학금 운용 △행복한 가정 지원센터 발족 △낙태 반대 및 입양 운동 △결혼예비학교와 결혼주례를 통한 출산서약운동 전개 △비어 있는 종교시설 공간의 육아와 탁아시설 활용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세계평화, 비폭력, 유전자코드 보호 등을 내세우는 종교단체 라엘리안은 저출산 대책에 반대하여 "출산장려는 국가(민족)이기주의 발로다"라는 주장을 편다.

즉, <한국라엘리안무브먼트>(www.rael.org)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기존 종교계가 공동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한마디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면서 <프랑스인구연구학회>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구상에는 65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을 정도로 이미 인구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 현상을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기고 환영할 일이다. 인구문제는 개별 국가가 아닌, 지구촌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 창설자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라엘(RAEL) 역시 "이미 지구는 인구과잉 상태이므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안된다. 그럼에도 정치가들은 여성들이 더 많은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지구 전체가 아닌 그들의 나라만을 위해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전히 내 나라가 우선이고 지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이기적인 국수주의의 발로다"라면서 그 증거로서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제 3세계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한다. 세계의 모든 곳에서 여성들에게 아기를 더 적게 낳도록 하고, 국경을 열어 지구라는 이름의 마을 전체에서의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요구는 이민으로

2) <한겨레> 2005-11-14 오후 05:59:18 저출산이 '문제'인 진짜 이유, 장지연(노동연구원)

대신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책일 것이다. 부유한 나라들의 정치가들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게 하면서 반이민법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 동안, 지구의 절반이 굶주려 죽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것은 완전한 인종주의로 그곳에는 다른 인종들은 굶어 죽던 말던 그들을 우리의 국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가진 같은 인종의 더 많은 아기들을 필요로 한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³⁾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주장은 세계를 단위로 할 때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 단위로 보았을 때 저출산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2) 고령화 변동추이와 문제점

다음에 고령화 현상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하는데 반해 고령화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며 인구구조가 비교적 젊은 편이다. 2000년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선진국에서는 평균 14.4%(평균연령 37.4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동 비율이 7.2%(평균연령 32.6세)로 선진국 평균의 절반 정도이다.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고령화의 국제적 비교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 7%에서 14%에 이르는 기간이 19년으로 일본의 24년과 프랑스의 115년과 비교할 때 엄청난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표 3> 고령화 변동 추이의 국제간 비교

| 국가별 | 도달년도 | | | 소요년수 | |
|-----|------|------|------|-------|--------|
| | 7% | 14% | 20% | 7→14% | 14→20% |
| 프랑스 | 1864 | 1979 | 2020 | 115 | 41 |
| 스웨덴 | 1887 | 1972 | 2012 | 85 | 40 |
| 미국 | 1942 | 2013 | 2028 | 71 | 15 |
| 일본 | 1970 | 1994 | 2006 | 24 | 12 |
| 한국 | 2000 | 2019 | 2026 | 19 | 7 |

자료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200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340만명으로 1970년 100만명에 비해 3.4배 늘어났으며, 2030년에는 2000년의 3.4배인 1,16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0세 이상 인구도 2000년 201만명에서 2030년에는 3.9배가 증가된 789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80세 이상 인구도 2030년에는 2000년에 비해 5.3배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www.icacci.org

한편 시·도별로는 2000년 현재 노년인구의 비율을 보면 서울(5.3%), 울산(4.0%)은 노령 인구 구성비가 전국 수준보다 낮은데 비해, 충남(11.9%), 전남(13.4%) 등은 훨씬 높게 나타난다. 2020년에 이르면 서울(15.1%) 등 11개 시도의 노년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며, 특히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18%를 상회하여 이들 지역은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⁴⁾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년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인구수)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의 변천을 보면 1960년 7.7에서 1970년에는 7.9로 1960년대까지는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관리 및 영양섭취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령화 지수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는 11.4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1990년에는 19.4, 1995년에는 25.2, 2000년에는 35.0으로 나타났다.

<표 4>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 변동추이

|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10 | 2020 | 2030 |
|----------|------|------|------|------|------|------|-------|-------|
| 0-14세(%) | 42.8 | 42.1 | 33.8 | 25.7 | 21.0 | 17.2 | 13.9 | 12.4 |
| 65세이상(%) | 3.3 | 3.3 | 3.9 | 5.0 | 7.3 | 10.7 | 15.1 | 23.1 |
| 노령화지수 | 7.7 | 7.9 | 11.4 | 19.4 | 35.0 | 62.0 | 109.0 | 186.6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조사」, 해당연도.

저출산·고령화의 후 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당장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력 손상이 불가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감소분은 매년 0.25-0.75% 정도 된다. 이처럼 경제 성장 둔화가 불을 보듯 뻔한데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성장 잠재력 손상도 피할 수 없다.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 즉 인구의 고령화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를 막론하고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인구 고령화를 우려하는 것은 부양하는 세대와 부양받는 세대 간의 재분배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과 젊은 층 사이의 '세대간 전쟁'은 미래의 폭탄이다. 당장 2020년이 되면 생산 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40년이 되면 2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4) 이희연(2003), 「인구학」, 범문사, p. 217.

노후 보장의 골간인 국민 연금만 하더라도 후(後) 세대의 과중한 부담과 장기 재정불안으로 존립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고령화 경향에다 저출산 기조까지 겹치면 그 폭발력은 배가 된다. 일례로 과잉 투자된 학교와 교원의 구조조정, 장병 감소에 따른 국방력 약화 등이 당장 현실적 사안으로 떠오른다. 외국인 노동자로의 노동력 대체, 아동 시장 축소에 반하는 실버산업 확대 등 그 파장이 미치지 않을 분야가 없다.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같이 인구억제 정책에서 비롯된 정책적 오류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인구가 인구 대체 유지 선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유인 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즉, 어떠한 정책으로도 고령화 자체는 개입할 수 없는 것이며 평균 수명이 증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인인구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인류의 축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지 정책은 늘어난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문제와 건강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 능력이 약화된 노인을 수발(care)하는 부문에 정책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 개입에는 정부, 가족, 기업, 노인 자신 등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단계에서 출발한다.

3. 학교 인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 초등학교 5-1학기 『사회과 탐구(교육인적자원부, 2003)』 교과서 대주제 <우리가 사는 지역> 속의 중주제 <도시 지역의 생활>의 '2 도시로 물려들고 있어요'란 소주제(59~64쪽)에서 이촌향도의 인구이동이 다루어지고 있음.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인구이동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인구이동은 왜 일어날까?'
'왜 이사를 했습니까'
- ▶ 중등학교 7~8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중학교 사회 3』(도서출판 디딤돌, 2002) <6장 '인구성장'과 도시발달> 대단원 속의 중단원 1(160~167쪽)에서 <인구성장(인구변천론)과 인구이동(이동원인과 O·D그림에 의한 이촌향도)>에 대한 이론적 설명 외에 <인구분포(한국의 인구분포 변천 포함)>를 다루고, 중단원 3(176~183쪽)에서 다시 '인구 및 도시문제'에서 인구문제를 과잉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작금의 인구교육의 반성에는 <한국교원대학교> 윤인경 교수의 분석이 잘 되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⁵⁾

7학년에서 인간 존중 영역에 대해서는 대체로 골고루 다루고 있으나, 인구 영역 중 사회

5) 윤인경(2006),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목표와 내용,"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p. 31.

변화와 출산의식의 변화, 저출산의 현황과 전망 등을 다루는 내용에서는 매우 빈약한 감이다. 또한 고령화와 고령화 사회, 고령화의 명암과 전망 등의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 영역에 대해서는 가족원의 역할, 노인 부양 등 2개의 요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내용 요소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 복지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 요소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

8학년에서는 인간 존중 영역 중 특히 아동의 인권과 성 평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인구영역이 사회과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8학년에서 인구변동과 구조라는 요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다른 내용 요소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가족 영역에 대해서는 가족원의 역할 요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복지 영역에 대해서는 고령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9학년은 중학교 3개 학년 중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교육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인구 영역 중에서 사회변화 저출산, 출산정책, 저출산의 전망 등의 요소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가족 영역 중에서 출산과 양육 관련 내용, 복지 영역의 지원 제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 ▶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사회』(주, 교학사, 2005)에서는 대단원 《3. 지역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속의 중단원(92~93쪽) 2 <교통발달과 농촌의 토지이용 변화>에서 자급적 농업에서 상업적 농업으로의 전환 내용과 농촌의 관광·레저공간화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중단원 3(94~97쪽) <농촌과 도시의 인구변화와 인구문제>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 현상과 인구구성(피라미드모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인구문제의 현상(都密農疎, 인구구성 불균형, 노령화 문제 등)과 그 대안(양적 성장억제, 낙후지역개발, 복지확대)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서울을 예로 하여 종주화(宗主化), 수위(首位) 도시화(스폴현상)를 설명하고 있다.

10학년도 9학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교육내용 체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역시 9학년과 거의 같은 내용들이 누락되고 있다. 11~12학년의 선택과목 중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등 지리 영역의 3개 선택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교육내용은 한국지리를 중심으로 인구영역에 치중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가족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인간 존중과 복지 영역에 대한 언급은 없다.

11~12학년의 선택과목 중 『사회 문화』, 『법과 사회』, 『정치』, 『경제』 등 일반사회 영역의 4개 선택과목 중에서는 『사회 문화』 과목이 저출산·고령화 교육내용을 가장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법과 사회』, 『정치』, 『경제』 등의 과목은 주로 인간 존중 영역에 치중하여 관련내용을 담고 있다.⁶⁾

6) 상계서, p.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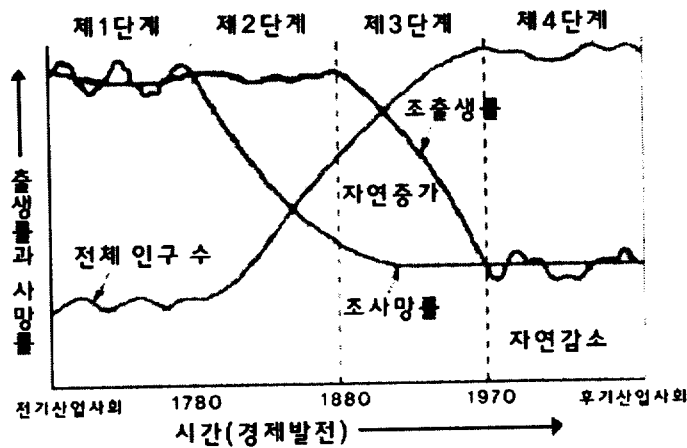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보아 초·중등 사회과에서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미흡함이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 결과로서 차기 교과서 개편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은 교사의 행간 읽기와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인구변천(the demographic transition) 단계에 따른 인구문제

인구 현상의 변화에 어떤 질서성(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945년 데이비스(K. Davis)가 '인구변천(The Demographic Transi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논문을 쓴 때부터이다. 인구변천론의 기본 전제는 인구변천은 근대화(modernization)와 출생률의 감소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기초 자료는 당시 가장 선진지역이었던 영국과 북구에서 200년 간 경험한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 과정에 관한 자료였다. 이후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UN 「인구국」에서 정리하여 정형화된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UN의 지원정책(예방의학의 보급, 말라리아 퇴치 등)에 따라 제3세계 저개발국가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인구폭발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선진제국들의 위기 의식이 싹텄다. 이에 따라 UN 「인구국」에서는 저개발국가의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플랜이 마련되고 그 일환으로 먼저 인구성장의 일반적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4단계의 패턴을 갖는 <인구변천모델>이다.

The standard demographic transition



출처 : Huw R Jones(1981), A Population Geography, Harper & Row, Publishers London

I 단계의 고위정지기(~1780년) :

多産多死 형태로 높은 출생률을 보이나 높은 사망률 때문에 인구성장이 정체된 상태를 말한다($r=0.3\%$). 산업혁명 이전의 전근대 사회(Pre-modernism, Pre-industrial society)로 출생률은 일정하나 주기적인 흉년과 전염병 등으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남. 평균수명이 30년 내외.(한국에서 1대를 30년으로 보는 것을 참고)

현재, 아프리카, 남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자급적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노동력으로서 가족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존 안전망이 튼튼함(十匙一飯). 富貴多男(양성불평등사회, 씨받이, 씨내리 문화) 사상이 보편적(자녀에 의한 노후보장, 자족적 복지사회), 권위주의에 의한 억압사회, 가족간의 온정유지

- ▶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전의 시대, “자기 먹을 것은 지니고 태어난다”(자식은 소비주체이자 생산의 주체)조신숭배(祖神崇拜)·경노사상 강조→봉사후손(奉祀後孫) 긴요, 지역공동체보다 혈연공동체 지향

II 단계의 초기확장기 (1780~1880년) :

多産減産 형태로 출생률은 여전히 고율이나 사망률이 낮아짐으로써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 현재 개발도상국가들에 해당. 인구의 부담단계(burden phase, 양육비부담).

산업혁명의 시작이 근대화 촉진. 이촌향도 현상, 예방 및 치료 의학 발달, 신종 작물 도입과 개량 그리고 비료의 발명으로 식량생산 증가 영양상태 양호→사망을 저하시킴.

인구증가율(r) 3%까지 상승 인구폭발 현상 유발, (평균 $r=2\sim3\%$ 인구 배증기간 30년)

→산업화에 따라 빈부격차 현격·공간적, 직업적 이동성의 증대에 따른 예측에서 탈출가능.

프랑스 혁명(1789), 민주화, 제급구조의 재편성과 진보(좌파, 평등, 분배)와 보수(우파, 자유, 성장)의 이데올로기 시대(사회주의) 등장→멜서스(『인구론』, 1798)와 마르크스(『자본론-상대적 잉여인구론-』 1867)의 인구이론 논쟁→생존 내지 복지 문제가 가족에서 국가로 이동시작

근대성의 시작→모더니즘(modernism, industrial society)시대(Fordism, 성장중심시대, 중앙중심시대, 남성중심시대, 자연정복시대, 민족주의시대)

- ▶ 한국에서는 1910~1985. 1960년 출산율 6.0%

한국의 인구표어 : ‘뒹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60년대)’, ‘3·3·35 운동’(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박목월 시인이 작사한 ‘사랑의 열매’: ‘우리는 가꾸리라 행복의 나무 한 개씩 삼년마다 열매가 여는...하늘의 삼태성은 삼남매지만 영원히 빛나리라 찬란하게도’)(60년대)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70년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짧게 살자(80년대)’.

1970년대 예비군과 현역 군인 대상의 정관수술(48만 2241명 수술), 1976년 난관수술 법 도입, 77년 여성 상속권 인정(잘 기른 딸 하나가 열 아들 안 부럽다), 78년 2자녀 이하 불임수술 후 주택분양권 우선, 성감별 불법화, 1983년 콘돔 자동판매기가 등장

III단계의 후기 확장기(1880~1970년대) :

減産少死 형태로 사망률은 저하할 대로 저하하고 출생률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r=2-1\%$) 경제개발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 칠레, 중동 산유국 일부, 동유럽 등이 해당. 인구의 보너스 단계(bonus phase, 생산 연령층 확대).

근대화 후기로 도시화율 90% 이상으로 도시화 완료. 자녀에 대한 가치관 급변. 여권신장. 근대성의 만발 시대

- ▶ 한국은 1985~2000년 사이. 1985년 → 합계 출산율은 2.1명으로 '제로 퍼플레이션 (Zero-Population)' 시대 돌입,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90년대 전반)
- 1995년 출산억제정책 폐지,(한국 스스로가 아닌 <인구개발국체회의>의 행동강령에 의한)→인구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을 향한 신인구정책 구상
- 3차산업 인구 50% 상회, 1990→도시화율 75%(도시화 안정기 진입), 인구증가율 1%대.

IV단계의 저위 정지기(1970년~) :

少産少死의 형태로 저출생률과 저사망률을 보이는 인구변천 종료 단계로 선진 공업국들이 이에 해당. 인구의 노령화 단계(aged phase, 노인부양비 부담).

출생률의 기복 현상은 경기변동 관련(스웨덴의 1990년 대의 불황 후의 '신(新)베이비 붐', 한국의 1997년 말 외환위기 후의 출산율 급락),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DEWK족↔TONK족)

DEWK(Dual Employed With Kids)

TONK(Two Only, No Kids)

인구감소문제 대두. 저출생·고령화 문제. 역삼각형의 인구피라미드

돌봄노동(Care Work)의 공백화

개인주의에 기반한 '웰빙(well being)' '웰다잉(well dying)'의 시대(인생의 마무리를 밝고 아름다우며 품위있게 하기).→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post-industrial society)시대

선진유럽 제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출산장려정책(아동수당제, 부부 육아휴직제, 사회보장제)을 펴서 현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가짐(2000년 현재 영국 1.64, 미국 2.06, 프랑스 1.88, 독일 1.36, 스위스 1.50)

일본은 1989년의 <엔젤플랜>(육아휴직법 및 아동수당법 제정, 자녀양육지원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으로 출산률 유지(1.29)

▶ 한국은 2000년 이후 현재 :

2005년 한국의 총인구 4천725만4천명(세계 26위). 인구증가율(r) 0.48%. 인구감소 현저. 출산장려책 마련. 다산(多産)이 미덕인 시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 “가족계획, 이제는 출산입니다”(서울시 표어). ‘1·2·3 출산운동(결혼 후 1년 내에 임신을 해서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확산

2004년 대통령 자문 기구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설치. 2005년 <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시행·보건복지 산하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설치. 2006년 국무총리실의 <새로마지플랜> 마련.

晩婚·晩産(교육·취업기회의 지연), 기회비용(자녀양육비)의 증대, 독신(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포스트모더니즘 가치관(안정주의, 개인주의)의 확산.

→ Nomadism(分居移動生活) : 이동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비용의 증대

독수리 엄마, 기러기 엄마, 팽귄 엄마(‘독수리’는 남편의 경제력을 가리키는 메타포다. 언제든 태평양을 건너올 수 있는 ‘부자 남편’이 독수리,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평범한(?) 남편이 ‘기러기’다. 한국에서 고단하게 살면서 생활비만 부치는 남편은 ‘팽귄’이다)

‘부자식이 상팔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獨子 사위 맞기’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적 이기주의에서 도덕적 개인주의로의 지향에 따른 자녀에 대한 기대 상실(사회보장제 효과; 역설적) 사후세계(祖神과 祭祀)에 대한 불신에 따른 가족해체 및 부부가족화→독거가족, 맞벌이의 DINK가족(Double Income, No Kids!), TONK가족(Two Only, No Kids) 확산

5.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안)론

초·중등학교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교육방안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남상준 교수가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997년 개정, 시행되어오고 있는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은 2005년에 시안이 마련되어 실험·적용단계에 있어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교육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하기에 적합한 시기로서 이와 관련하여 남상준 교수가 개발한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표 6>과 같다.

<표 5> 저출산·고령화교육을 위한 중점 관련교과(사회, 도덕, 가정/실과) 시안

| 대영역 | 중영역 | 소영역 |
|---------|------------|----------------------------|
| I. 인간존중 | 1. 인권 | 1) 생명존중과 태아보호 2) 아동의 인권 |
| | 2. 평등 | 3) 고령자의 인권 |
| II. 인구 | 1. 인구이동 | 1) 성평등 |
| | 2. 저출산 | 2) 연령평등 |
| | 3. 고령화 | |
| III. 가족 | 1. 변화하는 가족 | 1) 인구변동과 구조 |
| | 2. 출산과 양육 | 2) 인구동향과 사회 |
| | 3. 고령자 | |
| IV. 복지 | 1. 지원제도 | 1) 사회변화와 저출산 |
| | | 2) 출산정책 |
| | | 3) 저출산의 전망 |
| | 2. 직업 | 1) 고령화와 고령화사회 |
| | | 2) 고령화의 명암 |
| | | 3) 고령화의 전망 |
| | | 1) 다양한 가족 |
| | | 2) 가족원의 역할 |
| | | 3) 자녀교육과 노인부양 |
| | | 1) 부모됨 |
| | | 2) 양육 |
| | | 1) 고령자에 대한 이해 |
| | | 2) 노년기 준비 |
| | | 1) 출산·양육지원제도 |
| | | 2) 건강가정 지원제도 |
| | | 3) 고령자 지원제도 |
| | | 1) 직업세계의 변화 |
| | | 2) 직업준비와 선택 |

<표 5>에서와 같이 인구교육은 어느 한 교과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목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관련이 깊은 교과목이라면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루게 되는 사회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II. 인구' 전체 및 'IV-1-3. 고령자 지원제도'이다. 이렇게 결정된 저출산·고령화 관련 교육내용 체계 중에서 사회교과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논의된 것은 <표 6>과 같다.

중영역 '1. 인구변동'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구학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설정했으며, 중영역 '2. 저출산'과 '3. 고령화'는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현상을 중심으로 추출한 소영역들과 내용요소들을 포괄하는 부분이다. 즉,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교육 과정을 사회문제의 관점에서 추출한 개념들로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사회교과에서 저출산·고령화 교육내용의 영역과 요소

| 대영역 | 중영역 | 소영역 | 내용요소 |
|-------|---------|---------------|--|
| Ⅱ. 인구 | 1. 인구변동 | 1) 인구변동과 구조 | ○ 인구의 의미 ○ 인구성장 ○ 인구이동·분포와 인구구조 |
| | | 2) 인구동향과 사회 | ○ 세계와 한국의 인구변화 ○ 미래인구 추계 ○ 인구변동과 근대화 ○ 사회변화와 가족·인구문화 |
| | 2. 저출산 | 1) 사회변화와 저출산 | ○ 사회변화와 출산의식의 변화 ○ 여성의 사회진출과 보육정책의 변화 |
| | | 2) 출산정책 | ○ 인구정책의 변화 ○ 출산억제정책과 저출산 |
| | | 3) 저출산의 전망 | ○ 저출산의 현황 ○ 저출산의 전망 |
| | 3. 고령화 | 1) 고령화와 고령화사회 | ○ 고령화의 의미 ○ 고령화의 단계와 특징 ○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 |
| | | 2) 고령화의 명암 | ○ 수명의 연장과 장수사회 ○ 고령화의 성별, 지역별, 세대별 격차 ○ 고령화와 생산력 감소 ○ 고령화와 노년인구의 부양 |
| | | 3) 고령화의 전망 | ○ 세계와 한국의 고령화 현상 ○ 한국 인구의 고령화 전망 |
| | Ⅳ. 복지 | 1. 지원제도 | 3) 고령자 지원제도 |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총괄 목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과 인권존중, 성평등과 세대평등의 가치를 구현하여 우리 사회의 인구적 정화와 가족친화적 생활 및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로 설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교과는 대영역 ‘Ⅱ. 인구’ 및 ‘Ⅳ-1-3’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인구의 기본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며,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의 구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총괄목표와 ‘Ⅱ. 인구’의 대영역 목표하에 설정된 중영역, 소영역별 목표 및 ‘Ⅳ-1-3’ 소영역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Ⅱ-1. 인구변동 : 인가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인구변동과 근대화, 사회변화와 가족·출산 관련 가치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형성한다.

Ⅱ-1-1) 인구변동과 구조 : 인구변동과 사회의 상호작용, 인구의 성장, 인구가동, 인구분포와 인구구조 등의 개념을 이해한다.

Ⅱ-1-2) 인구동향과 사회 : 우리나라와 세계인구의 시대별 변동과정을 파악하고, 미래 인구의 추세를 이해하며, 그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인구변동과 한국사회의 근대화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가족·인구문화의 변천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변화가 가족·출산 관련 가치관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Ⅱ-2. 저출산 : 한국의 사회변화, 인구변천 단계에 따른 인구정책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변화가 저출산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며, 저출산의 전망과 그에 적합한 대책을 탐색한다.

Ⅱ-2-1) 사회변화와 저출산 : 여성의 사회진출, 보육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출산관, 자녀관의 변천에 대하여 이해한다.

Ⅱ-2-2) 출산정책 : 한국의 시대별 인구변동과 이에 따른 인구정책의 변천과정을 출산정책 중심으로 파악한다.

Ⅱ-2-3) 저출산의 전망 : 한국의 저출산의 실태와 전망을 생산인력의 감소, 유년인구의 감소 및 인구의 고령화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Ⅱ-3. 고령화 : 한국의 고령화, 사회화 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미래의 고령화 추세를 전망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고령화 사회 문제점들을 분석,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Ⅱ-3-1) 고령화와 고령화사회 : 한국사회의 고령화의 성격과 특징이 개인, 가정, 사회와 가지는 관계와 의미를 이해한다.

Ⅱ-3-2) 고령화의 명암 : 장수사회, 고령화 격차의 측면, 생산력의 감소와 부양비의 증가 등의 관점에서 고령화 사회가 가지는 양면성을 이해한다.

Ⅱ-3-3) 고령화의 전망 : 세계와 한국의 고령화 현상의 실태를 이해하며, 한국 인구의 고령화 전망을 인구구조, 부양인구비 등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Ⅳ-1-3) 고령자 지원제도 :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고령자 지원제도의 종류와 기능 등을 알고, 더불어 사는 고령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교과의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는 기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교육전체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교과가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체완결적인 목표 및 내용체계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렇지만 저출산·고령화 관련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할 인구의 기본개념들이 보다 충분히 강조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교육내용이 인구학적 기본개념의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개인 및 집단의 참여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대영역 및 소영역 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 관련 교과라는 틀 속에서 'Ⅱ. 인구'의 소영역 설정이 현상의 파악과 문제의 인식에 그치고, 그 해결에 대해서는 다른 대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Ⅳ-1-3) 고령자 지원제도'가 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시된 저출산·고령화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표는 자체로서 독립적인 하나의 목표·내용 체계이면서도 관련 교과의 목표·내용체계를 존중하는 틀로서 개발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인구 교육은 사회적으로 드러난 인구현상과 문제점을 찾아서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인구현상과 인구문제는 지역적·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정된 관념이나 이론만으로 인구교육의 개념화를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느 시대에 어떠한 인구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는 바로 그 시대 그 지역에 적합한 인구교육의 개념을 규정화하는데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구교육이 왜 필요하며 인구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해진다.

인구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박용현, “인구교육의 실제”, 신극범(편), 『인구교육』, 교육출판사, 1986)

첫째, 인간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 인구현상과 관련된 사회 및 사회현상,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셋째, 인구문제가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함으로써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한다.

넷째, 인구문제와 여러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 정책, 조직, 활동 등을 알게 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확립한다.

다섯째, 출산증대와 인구증가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제 요인을 알게 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고와 태도 그리고 동기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인구 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인구교육의 개념은 인간의 복지적 관점의 인구정책과 태도·동기 등의 가치관을 포함한 상황적인 콘텍스트가 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심모슨(Simons, 1972:2)이 "인구 교육은 인구 문제에 관련되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가족계획의 방법보다 더 포괄적인 수단으로 네 가지의 교육적 접근, 즉 성교육, 가족생활, 인구 인식 및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해서 젊은 세대로 하여금 그에 대한 태도, 가치 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인구 교육의 목표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선진 각국들의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인구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서 비롯된 인구문제가 가져오는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한 인간 복지의 질적 수준의 영향 요인을 찾아내어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인구행동·태도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 학습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교육의 내용은 이러한 인구교육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대책으로서의 인구정책과 사회구성원들의 인구 가치관 함양과 형성에 관한 내용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고수현(2006),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연합.
- 방하남(2006),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우리 교육의 전략,"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 신극범(1986), 『인구교육』, 교육출판사.
- 이희연(2004), 『인구학』, 법문사.
- 이현승·김현진(2006), 『늘어가는 대한민국』,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 『인구통계연보』, 각연도.
- 일본 후생노동성 www.mhlw.go.jp
- EU : <http://epp.eurostat.ec.eu.int>
- Huw R. Jones(1981), A Population Geography, Harper & Row, London.
- NCHS www.cdc.gov
- UN : Demographic Yearbook 2003
- UN, Population Perspectives, 2004
- 기타 인터넷 자료.